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2018.6.20.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철강·조선·석탄 산업”에 관한 “보전상황 보고서”를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¹⁾ 이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Decision: 39 COM 8B.14)에 담긴 권고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권고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과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일본의 해당 시설들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하여 일본의 등재시도가 특히 침략전쟁과 강제노동을 은폐하고 근대화의 역사를 미화하는 것으로 비판했고,²⁾ 최근에는 “한일 시민이 함께 만든 세계유산 가이드북: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을 발간하였다.³⁾ 등재 결정 4(g)는 “각각의 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기여하고 일본의 산업화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또한 각 유산의 역사 전체(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산에 대한 설명(presentation)을 위한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전략 수립 의무와 함께 등재 결정 4(g)의 각주에 담긴 일본 정부대표의 약속도 중요하다: 일본정부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 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였다.⁴⁾ 이러한 일본 정부대표의 약속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지금까지의 권고 이행상황은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의 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역행하며 유네스코 자체의 존재이유마저 의심하게 한다.

첫째, 일본의 해석전략에는 2015년 7월 5일에 일본정부가 공약한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것이 “지원했다”(supported)로 변경되어 ‘역사 전체’가 아닌 반쪽짜리 역사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정부

1) Cabinet Secretariat, Japan,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Japan) (ID: 1484), http://www.cas.go.jp/jp/sangyousekaiisan/pdf/state_of_conservation_report.pdf.

2) 첨부 자료: 2017년 7월 5일 한일공동성명서 참조.

3) <https://www.minjok.or.kr/archives/92679>.

4)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hirty-ninth session, Bonn, Germany, 28 June - 8 July 2015, Summary Records, WHC-15/39.COM.INF.19, p. 222.

는 “강제로 노역한” 사실과 징용정책을 언급했지만 “강제노동”의 존재를 여전히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이래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국과 중국의 징용노동자 문제는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⁵⁾

둘째, 일본이 설명하여야 할 강제노동의 역사는 이제 은폐를 넘어서 일방적인 왜곡의 길을 가고 있다. 보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등에서 있었던 ‘노동’과 ‘징용’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그 곳에서 민족차별이나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3) OUV[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초점을 전제로 산업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의 해석은 OUV기간 동안 일본의 산업노동자들에 초점을 두어야하는 한편 OUV기간 외의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일본정부가 노동자들의 징용정책을 이행했다는 사실과 전쟁 전과 전쟁 동안 그리고 전후에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supported]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50쪽)고 하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산업을 지원한 사람들로 탈바꿈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책임질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철저하게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 자료관 등 활동가들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2017년 10월 이 단체가 인터넷에 올린 “세계유산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라는 동영상은 일본정부가 어떤 자세로 ‘역사 전체’에 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해당 세계유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산업혁명유산’으로 도저히 분류될 수 없는 시설들, 특히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사설 학원이 어떻게 인류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자국 중심의, 군국주의의 역사를 찬미하는 역사 인식은 유네스코의 이념인 세계평화와 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이 문단은 앞 페이지 “첫째”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문맥에 맞게 뒤로 배치함]

이외에도 일본의 보전보고서는 해석전략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유산들에서 무엇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은 물론 그 동안 국제사회가 발전시켜온 해석전략과 관련된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1964년의 “ICOMOS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베니스 헌장”,⁶⁾ 2006년의 “니즈니 타길 산업유산에 대한 헌장”,⁷⁾ 2008년의 “문화유산유적의 해

5) 예컨대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3rd Session 1996, Report III (Part 1A), pp. 127-131; Observation (CEACR) - adopted 1998, published 87th ILC session (199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 Japan (Ratification: 1932), para. 12,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2172187.

6) The ICOMOS Venice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4, https://www.icomos.org/charters/venice_e.pdf.

7) The Nizhny Tagil Charter for the Industrial Heritage, <https://www.icomos.org/18thapril/2006/nizhny-tagil-charter-e.pdf>.

석과 제시를 위한 ICOMOS 헌장”,⁸⁾ 2010년의 ‘산업유산 유적, 구조물, 지역 및 경관의 보존에 관한 ICOMOS - TICCIH 공동원칙’⁹⁾ 등이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진정한 인류의 공동유산이 되려면 일본정부는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기준들에 따라 역사전체에 대한 해석전략을 수립하고 대중들(the public)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소통(public communication)을 통하여 이 유산들이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 유산의 진정성을 완전하고 풍부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2008년 ICOMOS 헌장이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present)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들은 모두 유적(遺跡) 해석의 요소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게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전략을 요구한 것은 세계유산 등재제도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등재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이러한 공약을 지키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며,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2.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3.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역사 전체’에 포함시킬 것;
4.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제2차 세계대전, 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역사 전체’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5. 일본정부의 해석전략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제동원 관련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할 것;
6.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취하도록 촉구할 것.

[단체 소개]

민족문제연구소: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 하고, 한 일 과거청산을 통해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 『친일인명사전』, 『일제식 민통치기구사전』 등 사전 편찬·발간, 강제동원피해자·유족의 피해조사와 재판지원, 증 언집 발간, 자료수집과 전시 등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전개.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추진

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http://icip.icomos.org/downloads/ICOMOS_Interpretation_Charter_ENG_04_10_08.pdf.

9) Joint ICOMOS - TICCIH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structure, areas and landscapes, https://www.icomos.org/Paris2011/GA2011_ICOMOS_TICCIH_joint_principles_EN_FR_final_20120110.pdf.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한국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7월 일 본 전 국 각지 시민이 참가하여 결성. 피해자 유골 조사와 미불임금의 공탁문제, 우편저금 문제 등 한국의 위원회와 협력·연대하여 그 실태 해명과 정보공개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 하는 활동 전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 2차례 성명 발표

[첨부: 한일공동성명서]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2년 전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23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등재 시도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피해자는 물론 유네스코 창립정신을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일본의 우경화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관련 역사 전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네덜란드, 중국에서도 전쟁 포로와 노예노동을 기술하지 않은 세계유산의 등재를 반대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따라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국제기념유산협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1940년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 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많은 조선인 등이 있었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총회장에서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2015년 7월, 일본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주도했던 가토 고코를 내각관방 참여로 임명하고, 전쟁 중 한반도에서 동원된 ‘징용공’ 등에 관한 ‘최초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 유네스코에 ‘해석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실태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보고가 공표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소식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갖게 한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서양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력으로 사람을 육성하고 산업을 일으켜 산업국가가 됐다” “해외의 과학기술과 자국의 전통기술을 융합하여 불과 5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일본”이라 하여 ‘위대한 일본’론만 펼쳤다.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본 우익 언론도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는 등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교과서

서술 지침에는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의 실태가 제대로 ‘정보센터’에 반영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의 산업화 진전과 일본의 발전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노동의 역사도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도 관계하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제 2차대전 중 연합군의 포로노동도 있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어 새겨진 역사가 산업유산에 담겨 있다.

유네스코 현장 전문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사람들 사이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가는 단계가 될 것을 우리들은 바란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그림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ICOMOS가 권고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전히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땀, 눈물, 피의 기록은 온전히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 역사이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이 이행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7월 5일

한국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 거사청산위원회

일본 : 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노!합사(NO!舎祀)